

# 강종성 한국계란산업협회장 기자 간담회 개최

윤 김기슬 기자 | 승인 2023.04.07 15:05

“식자재마트 ‘갑질’ 막아야”

대형마트에 해당되지 않아  
임의계약 또는 작성도안해  
표준계약서의 의무화 통해  
불공정 계약 사전 차단

대형마트 의무휴업 빌미로  
몸집 불리고 납품업체 억박  
미끼상품 명목 헐값 요구도  
중소마트 덩달아 할인 종용



강종성 한국계란산업협회장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대형마트의 기준을 농축산물에 한해 기존 3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유통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강종성 한국계란산업협회장은 지난 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대형마트의 기준을 재정립해 식자재마트들의 불공정 계약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자재마트들도 표준계약서를 의무 작성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의 기준을 하향 조정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야 한다는 것이다.

계란산업협회에 따르면 그간 식자재마트들은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받는 동안 이들을 위협할 만큼 몸집을 불렀다. 그러나 커진 규모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의 테두리에서 비껴나있는 까닭에 납품업체와 거래시에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강종성 회장은 "식자재마트는 대형마트에 해당되지 않아 표준계약서는 커녕 임의로 계약을 쓰거나 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허다 하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 계란 납품업체들은 손해까지 감수해가며 식자재마트의 갑질을 참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강 회장에 따르면 납품업체에 대한 식자재마트의 '갑질'은 일상화됐다. 신규 오픈시 마트 입점비뿐 아니라 미끼상품과 고객감사 세일을 명목으로 원가 이하의 계란 납품을 요구한다. 불응하면 구매중단이나 거래선을 변경할 공산이 큰 까닭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들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게 계란 납품업자들의 얘기다.

이같은 원가 이하의 계란 납품은 계란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미끼상품으로 왜곡된 계란가격은 거래가격의 기준이 되어 전체 시세 하락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식자재마트가 할인행사를 진행할 경우 인근 중소마트들도 덩달아 할인을 종용하게 돼 다른 거래처에서도 제값을 받을 수 없는 풍선효과를 일으킨다.

이에 따른 피해가 계란 생산농가와 소비자까지 미치는 것은 물론이다. 납품업자들은 여기서 발생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영세 산란계농가에 대한 압박이나, 타 마트 납품시 마진을 더 붙인다.

대표적인 예가 외국계 창고형 할인점이다. 이곳은 20~30%의 이윤을 남기는 일반 마트와 달리 1차 농축산물에 대해 5%의 이윤만 붙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트와 계란 판매가가 비슷하거나 높다.

강 회장은 "20~30%의 이윤을 남기는 마트와 5% 마진을 보는 할인점의 계란가격이 비슷한 상황"이라며 "왜 납품업자들이 서로 계란을 납품하겠다고 줄을 서겠느냐"고 반문했다.

업계는 이같은 식자재마트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소한 농축산물에 한해서라도 대형마트의 기준을 현행 3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불합리한 관행이 생긴 것은 그간 미온적인 대처로 식자재마트의 갑질을 사실상 방조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는 것이다.

강종성 회장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식자재마트들이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에 한해 대형마트 기준을 낮춰야 한다”며 “우리 계란 납품업자들이 마음 놓고 계란을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피력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기슬 기자